

광주시, 사랑 담고 나눔 더하는 '김장대전' 연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오는 11월 28일부터 12월14일까지 광주김치타운에서 '2025년 빛고를 사랑나눔 김장대전'을 연다.

광주시는 시민들이 김장철을 앞두고 손쉽게 김장을 준비하고, 기업·단체의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2014년부터 김장대전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김장대전 재료는 광주·전남지역에서 생산된 배추, 고춧가루, 멸치액젓, 소금 등을 공동구매해 제공되며, 세계김치연구소와 대통령상 수상자가 공동 개발한 레시피로 김치를 담근다.

김장가격(10kg 기준)은 ▲현장 버무리기 6만6000원 ▲현장 수령(완제품) 6만

11월28일~12월14일 김치타운서... 시민참여·기부 동시 가능

국산 재료·김치연구소 레시피로 김장... 희망자 사전신청해야

8000원 ▲택배(완제품) 7만원이다. 전통식품품질인증과 해협(HACCP; 식품안전관리) 인증을 받은 지역 김치제조업체가 참여해 시중보다 저렴하게 공급·판매한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김장대전 공식 누리집(www.kimchigwangju.co.kr)에서 사전신청해야 한다. 김치 기부 행사를 희망하는 기업이나 단체는 김장대전 사무국(062-676-3601)으로 문의하면 된다.

광주시는 김장철 외에도 시민들이 연중 김치를 담글 수 있도록 4월부터 11월까지

매일 둘째·넷째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김치 담그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프로그램에는 약 3450명이 참여해 총 24.3t의 김치를 담갔다.

주재희 경제창업국장은 "연중 김치담그기 프로그램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감사드린다"며 "28일부터 열리는 김장대전은 고품질 김치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는 행사인 만큼, 시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도록 품질 관리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광훈 기자



서구, 지방자치 공모전서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한 2관왕' 행안부장관상 2건 수상... 특교세 1억5천만원 확보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마을 중심의 자치행정을 실현한 성과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공모전에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2관왕에 올랐다. 서구는 20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주민자치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풍암동 B사업(주민자치 분야)과 거점-연계동 협력 시스템(제도 정책 분야) 두 개 분야에서 모두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하며 총 특별교부세 1억5천만원을 확보했다.

이번 공모전은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행정안전부와 (사)열린사회시민연합이 공동 주관한 행사로 주민자치의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류·인터뷰, 현장발표 심사 등 엄정한 절차를 거쳐 최종 우수사례 10건이 선정됐으며 서구는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두 분야에서 모두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서구는 품앗이 고유의 정체성을 담은 마을BI(Brand Identity)를 기반으로 25개 취향 동아리, 누구나 참여

가능한 BI템플릿 운영 등 마을 중심의 생활 밀착형 주민참여 플랫폼을 촘촘히 구축했다. 공간 중심의 주민자치에서 벗어나 모든 일상에 주민참여가 스며드는 구조를 만든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서구는 전국 최초로 생활정부국을 신설하고 거점동-연계동 협력 시스템을 구축해 동 행정의 기능을 재편했다. 이를 통해 주민맞춤형 서비스 제공, 행정 불균형 해소, 행정 효율성 제고 등 실질적 풀뿌리자치 기반을 강화한 정책적 혁신이 인정받아 기초자치단체 부문 제도정책 분야 전국 유일 수상 기관으로 선정됐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주민자치와 제도정책 두 분야에서 동시에 우수사례로 선정된 것은 서구의 혁신적인 자치 모델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만들어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내결재 생활정부' 모델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풀뿌리 자치를 구현해 주민이 체감하는 생활행정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석우 기자

전남도, '생활인구 생생생 프로젝트'로 지방소멸위기 극복 체류형 콘텐츠 등 '연결-유입-성장' 3대전략 100개 과제 추진

전라남도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에 지속 가능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월 1천만 명이 머무는 활력 전남'을 비전으로 인구대전환 시제인 '생활인구 생생생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생활인구 통계는 등록인구(주민등록·외국인)와 체류인구(월 1회 3시간 이상 머문 사람)를 더한 수치로 2023년 '인구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으로 정책에 도입됐다. 2026년부터 지방교부세 산정에 반영될 예정이다. 2025년 3월 생활인구 통계 기준 전남 인구감소지역 16개 군의 등록인구는 70만 명, 체류 인구는 278만 명으로, 생활인구는 348만 명에 달한다. 한 달간 등록 인구의 5배가 전남을 오가며 생활하는 셈이다.

이에따라 전남도는 지난 5월부터 24개 실국원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생활인구 유입 활성화 과제를 발굴하고, 전남연구원 인구전략추진센터와 함께 '생활인구 생생

생 프로젝트'로 연결-유입-성장 3대 전략, 20개 핵심과제, 100대 과제를 선정했다.

'연결' 전략은 전 국민이 전남을 '두 번째 고향처럼 느끼도록' 관계 인구를 넓히는데 중점을 둔다. '전남 사랑에(愛) 서포터즈 100만 명 육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관광·특산품·귀농귀촌 정책 등을 지속적으로 알려 정주 인구를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영상 콘텐츠를 활용한 '살고 싶은 전남' 브랜드 홍보를 대대적으로 펼쳐 전남에 대한 흥미와 친근감을 높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귀농귀촌 종합센터(서울) 운영, 전남 관광플랫폼(JN TOUR) 운영, 출항 항우 '고향에(愛) 가자', 청소년 메가 페스티벌 등 생활인구 유입의 출발점이 되는 20개 과제를 추진한다.

'유입' 전략은 전남에 '머무는 이유'를 만드는 것이다. 일·쉼·체험이 공존하는 체류형 생활공간과 콘텐츠를 확충할 계획이다. '권역별 상생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은 축제·숙박·체험 등 시군 간 보유 관광 콘



텐츠를 연계해 체류형 모델로 구축한다. '전남 위계이전 생활인구 정착 프로그램'은 시군별 거점을 조성해 장·단기 근무형을 운영하고, 숙박·체험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 참여를 확대한다. 장성 축령산을 명품 숲 거점으로 산림휴양·조림역사관·기념정원 등을 조성해 '100대 명품 숲 연계 콘텐츠'를 개발, 웰니스 관광모델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 마음건강치유센터 확대 운영, 섬바다 연안 크루즈 운영 등 지역경제를 움직이는 인구활력 체류형 모델 구축을 위해 50개 과

제를 추진한다. '성장' 전략은 머무는 인구가 전남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고 정착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둔다. '전남형 빈집재생 프로젝트'를 통해 농어촌 유휴주택 100호를 리모델링해 체류형 공간으로 재활용(70억 원)하고,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지역경제 순환을 촉진한다.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으로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주거공간과 창업·취업 연계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1개 시군 시범사업(공모)을 추진한다. /염선호 기자

1면에서 이어짐

중전 부지 개발 문제도 만만치 않다. 광주시는 호남권 비즈니스 허브, 신도시 '솔마루시티' 등을 추진했으나 난항을 겪자 최근 인공지능(AI)·빅테크 중심의 '광주형 실리콘밸리' 구상을 제시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침체, 원가 상승, 보상 문제 등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일부 시민단체는 '백만평 광주숲' 구상을 제안하기도 했다.

주민투표 역시 중대 관문이다. 법·제도적 기반이 대부분 마련된 만큼 주민수용성은 최종 변수 중 하나다. 반대가 우세했

던 과거와 달리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이전 찬성률이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후 교통망, 생활SOC 확충, 소음·환경 피해 최소화, 미래 비전 제시가 향후 여론 향배를 좌우할 전망이다.

무안공항 재개항 시점도 주목된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 개통시점에 맞춰 민간공항을 이전하겠다는 4차 협의 결과에 비춰보면 광주 민항 이전은 이르면 2027년 말, 늦어도 2028년 이전이 진행돼야 한다. 그때까지 무안공항 재개항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전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광주시의회 강수훈 의원은 최근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대형 항공사고는 조사에만 최소 4~5년이 걸리는 만큼, 호남권 장기 고립이 우려된다"며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 취항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패키지 이전이 아닌 '시간차 이전'에 대한 우려도 있다. 시민단체 광주시민회의는 성명을 통해 대구 군 공항 사례를 언급하며 "대구시는 5년 전 경북 군위·의성을 군공항 이전지로 확정했지만 현재까지도 진전이 없다"며 "군공항 이전 공수표"를 우려했다.

2020년 광주시가 시민 2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79.5%가 "민간공항 이전은 군공항과 연계해야 한다"

고 답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오랜 기간 표류해 온 군공항 이전이 실행국면에 들어선 것은 큰 성과"라며 "6차 TF가 본격화되면 여러 과제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 군공항은 1964년 송정리 공군부대 창설과 함께 현 위치에 자리하고 있으며, 민간공항은 1948년 동구 학동의 광주비행장 개항 후 1964년 1월 현 위치로 확장 이전했다. 민간·군공항의 패키지 또는 시간차 이전 논의는 2007년 무안국제공항 개항 이후 19년째 이어지고 있다. /이승원 기자

'여성이 안전한 도시 광주 동구', 성매매 예방 활동

경찰·소방 등과 손잡고 계림동 일대 유흥업소 주변 점검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최근 관내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성매매 방지 민·관·경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동구를 비롯해 동부경찰서, 동부소방서 등 15명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이 참여했으며, 계림동 일대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진행했다. 동구는 양성평등아동과, 인구청년정책과, 건축과, 위생과 등 관련 부서가 참여해 ▲성매매 방지 문구 게시 ▲위생 상태 ▲영업허가 준수 ▲불법 건축물 ▲청소년 출입 금지 문구 부착 등을 점검했다.

동부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와 동부소방서 예방안전과도 ▲성매매 및 음란·퇴폐 행위 여부 ▲소방시설 설치·작동 상태 등 범죄예방 및 안전관리 분야를 중점 점

검했으며 민간기관인 (사)여성인권지원센터 상담원이 동행해 업주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성매매의 불법성 안내, 피해자 지원제도 홍보, 예방 홍보물 배포 등 인식 개선 활동을 병행했다.

임택 동구청장은 "이번 합동 점검은 연말을 맞아 성매매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 사회의 인식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했다"면서 "앞으로도 여성친화도시 광주 동구를 위해 여성 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오철수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광주광역시
광산구의의회**

**소통하는 열린의회
현장중심 실력의의회**

"좌석은 절반, 불편은 두배"

광주송정역 고속열차

증편이 답이다

